

특별기고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경쟁력은 개방과 함께 높아진다”라는 명제를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 단기적 이익 보호를 위해 장기적 추락을 결과하는 어리석음은 더 이상 관란하지 않겠는가?”

경쟁력은 개방과 함께 높아진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찬반 논의가 첨예한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칠레 FTA의 논의 과정과 비준을 앞두고도 심한 갈등 현상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미 기류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 현상이다. FTA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FTA는 쌍무적인 자유무역 협정일 뿐, 모든 무역 상대국들에 적용되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무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는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한미 FTA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교환은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나는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지만 높게 평가하는 다른 사람에게 농구공을 주고, 다른 사람은 그 가치를 낮게 평가하

지만 나는 높게 평가하는 야구공을 받음으로써 각자의 부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교환 전이나 교환 후에 우리 경제에 존재하는 농구공과 야구공의 총량은 같더라도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에게 농구공과 야구공이 배분됨으로써 교환 당사자는 물론 경제 전체적인 부도 증가하는 것이다. 여기서 부(富)라는 것도 결국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하는 가치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무역은 국가 간 교환이다. 그러므로 자유무역은 분명히 교역 당사국 모두에게 국부 증가라는 이득을 준다. 무역은 자국에서 낮은 가치를 부여받는 상품을 수출하고 높은 가치를 부여받는 상품을 수입함으로써 나라 전체의 부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즉, 낮은 가치의 상품을 내 보내고 높은 가치의 상품을 받아들이므로써 국부가 증가한다. 그런 점에서 설령 타국이 보호무역을 하더라도 자국이 자유무역을 하면 자국은 이익을 얻는다.

자유무역으로 국부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유무역에 대한 이해 부족, 국가 내의 이해 당사자들 간의 충돌, 그리고 정치적 이유 때문에 전면적인 자유무역이 이루어진 시기는 별로 없었다. WTO의 출범과 함께 자유무역이 강조되었지만, 그 정신에 합당할만한 자유무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며, 이에 대한 반응으로 태동한 것이 FTA이다.

문 굳게 닫고 뭘 할 것인가?

FTA는 협정 당사국 간에 자유무역을 증진하여 이득을 얻고자 하는 조치이다. 그러나 시장이 개방되면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생기기 마련이다. 즉, 국내 경제 주체 간에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지는 현상은 피할 수 없다. 영농회나 농민단체들이 한·미 FTA에 극력 반대하는 이유는 그로 인해 손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물론 경쟁

력이 뒤지는 집단이 손해를 볼 수 있다. 보호무역의 주창자들은 흔히 경쟁력을 기른 다음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아직 시장 개방의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문을 굳게 닫은 채, 경쟁력이 높아지느냐는 것이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가 사전적으로 그러한 산업을 식별할 수 있는지는 점도 문제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전후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업에는 60조 원이 투입되었다. 그러한 농업의 경쟁력은 오늘날 어떠한가?

밖으로는 외국과의 교역을 회피하고 안으로는 저마다의 이익 보호를 위해 경쟁을 기피함으로써 얻은 결과는 모두 경쟁력 하락이다. 사유 재산권이 없어 경쟁이 있을 수 없는 북한이 총체적 추락의 전철이요, ‘평등’ 개념에 발목이 잡힌 한국의 교육 경쟁력이 그 실상이다.

폐쇄된 사회에서 경쟁력은 높아지지 않는다. “경쟁력을 기른 다음 개방해야”라는 명제 대신, “경쟁력은 개방과 함께 높아진다”라는 명제를 이제는 받아들여야 한다. 단기적 이익 보호를 위해 장기적 추락을 결과하는 어리석음은 더 이상 관란하지 않겠는가?

/yykim@chonnam.ac.kr

오세훈 돌풍에 ‘추풍낙엽’

오세훈 돌풍에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구도가 출렁이고 있다. 박계동 의원에 이어 당내 차세대 주자의 선봉장을 자임했던 박 진 의원이 12일 출마포기를 선언, 경선판도가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것. 오 전 의원이 9일 경선참여를 선언한 후 불과 사흘만에 무려 몇달간 경선준비를 해왔던 현역의원 후보 2명이 ‘추풍낙엽’처럼 낙마할 정도로 ‘오풍’(吳風)은 태풍의 눈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물론 외적요인도 있다. 당 공천심사위가 당헌에 의거해 이날 중으로 당내외의 심층 여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선후보를 3배수로 압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두 박 의원은 ‘타의’에 의한 중도포기 사태가 오기 전에 자신 사퇴를 선택한 셈이다.

이 때문에 경선완주를 주장하고 있는 권문용 전 강남구청장도 ‘예선탈락’의 고비를 맞고 있다. 경선후보의 잇단 사퇴는 ‘전략적 제휴론’으로 연결될 조짐이다. 사퇴후보를 끌어안음으로써 그 쪽의 조직표를 흡수하는 시너지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이미 박계동 의원은 사퇴와 동시에 오 전 의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박 진 의원은 홍준표 의원,

한나라당 박계동·박진의원 줄줄이 출마포기 서울시장 후보 경선구도 출렁...‘제휴론’ 주목



12일 국회 기자실에서 서울시장 후보 당내경선 출마포기를 선언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박진 한나라당 의원(왼쪽)과 같은 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뉴리이트 문화체육연합 창립대회’에 밝은 표정으로 참석한 오세훈 전 의원의 모습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맹형규 오세훈 전 의원 3인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오 전 의원은 박 진 의원을 선대본부장으로 영입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고 맹 전 의원과 홍 의원은 박 의원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현재까지는 박 의원이 오 전 의원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

만 정작 박 의원은 12일 지지후보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후보사퇴만 선언했다. 급반전되고 있는 경선판도 속에서 기존 양강(兩強) 후보였던 맹 전 의원과 홍 의원이 단일화해 ‘오풍’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당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맹 전 의원이 대표로 있던 중도파 그룹 ‘국민생각’은 12일 오전 박희태 김무성 김영선 김학송 홍문표 의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맹형규-박진’ 연대와 ‘맹형규-홍준표’ 단일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맹-박’ 연대는 박 의원이 김성조 의원과 함께 현재 국민생각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코드연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추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맹-홍’ 단일화는 맹 전 의원과 홍 의원이 각계약진으로는 ‘오풍’을 극복하기 쉽지 않다는 차원에서 일부 의원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오풍’을 등에 업고 소장파가 당을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중도파 및 중진의 견제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석 의원은 “맹-홍 단일화가 이뤄지면 좋은 것 아니냐. 못할 일도 없다는 정도라면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를 놓고 당내에서는 열린우리당 ‘강금실 카드’에 대항할 본선 경쟁력보다는 차기 대선 걸목까지 내다본 내부 ‘신-구 파워게임’의 잔영이 어른거린다는 비판적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성·고령자시간제근로 전환 가능

당정, 2008년부터 육아기간 근무시간도 단축

이르면 2008년부터 여성과 고령자 등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학업이나 질병 등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간제 근로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 여성들이 육아로 인해 직업 경력에 단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육아기간에 통상 근로시간의 절반만 근무하면 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일 국회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강봉균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보호 입법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문병호 제5정조위원장도 브리핑에

서 “시간제 근로 전환 청구권 제도가 도입되면 질병이나 육아 등 개인사정에 의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정규직을 유지할 수 있어 비정규직 확대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육아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해 자녀가 만 3세 미만인 경우 하루 또는 주당 통상 근로시간의 절반 혹은 4분의 1 가량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정부는 사업자에게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삭감된 임금의 일부를 보전하게 된다. 당정은 아울러 내년부터 학습지 교사나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관련법을 개정기로 했다. 당정은 비정규직 및 영세업체 종사자에 대한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연 100만원 이내, 5년간 3회까지 지원되는 근로자 훈련계좌제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또 2008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과 연차·야간 및 휴일근로, 연차유급휴가 등의 조항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실태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실태를 파악, 시정하는 한편 8월말까지 과건대상 업종 범위 등의 비정규직법안 하위법령을 제정키로 했다. /연합뉴스

퇴직연금제 확대 추진

5인미만 사업장·1년미만 근로자까지

오는 2008년부터 퇴직연금제가 5인 미만 사업장과 1년 미만 근로자까지 확대 추진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일 국회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강봉균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보호 입법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퇴직연금제는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됐으나, 2008년부터는 5인 이하 영세 사업장과 단기 근무 노동자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의 경우 사업주의 고용보험 신고나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는 사후에 보험료를 추징하도록 했다.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시간이나 연차유급휴가 조항 등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1인당 연간 100만원(5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직접 지급하는 ‘근로자 훈련계좌제’를 도입하고, 훈련 기간에는 생활비를 대충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동양 슈퍼 나이트클럽' (Dongyang Super Night Club) featuring a night scene and various entertainment options. Text includes '고곳에 가고 싶다' (I want to go to a good place), '매일 밤 8시 30분부터' (Every night from 8:30 PM), and '동양 슈퍼 나이트클럽' (Dongyang Super Night Club).